

# 선관위 증인 대거 불출석... 여야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

국조특위에 선관위 비상임위원 불출석 노태약 전 위원장 “책임 통감” 사과 여야 “납득 어려워” 출석 재차 요구

여야가 23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에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를 열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이 대거 불참했다. 이에 여야 국조특위 위원들은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노태약 전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이날 출석해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조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여야가 합의한 증인 다수가 불출석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중앙선관위에서는 노태약 전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위원장 직무대행) 외에 증인으로 채택된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7명이 모두 불출석했다. 오민석 전 서울시선관위 위원장과 송과구 선관위 10명도 불참했다.

김은혜 의원은 이에 대해 “노태약 증인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는 가운데 노태약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뉴시스

및 중앙선관위가 증인들의 출석과 관련된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위철환 상임위원은 “어제 있었던 회의에서 저는 ‘원칙적으로 모든 분이 특위에 참석해 모든 국민에게 진상을 소상하게 보고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그분들도 원칙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조만간 참석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원칙적으로 출석에 동의했는데 조만간 출석을 하겠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증인의 출석을 방해하면 처벌하게 돼 있다. (회의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 다거나, 오전에 안 와도 괜찮다고 한 선관위 공무원이 있다면 위원장 명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중앙선관위원들이 오늘 조직적으로 불출석한 것은 국민에 대한 조직적 항명”이라며 “비상임위원들이 (사전 회의에서) 논의했음에도 조만간 출석하겠다”고 한 것은 출석하지 않

겠다고 답합한 것이다. 강력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태약 증인만 제외하고 비상근 선관위원 전원이 불출석했다”며 “이분들이 ‘짬짜미’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국정조사를 통해 참정권 훼손 사태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데, 이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대항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양부남 의원은 위 상임위원의 답변을 두고 “그럼 7명의 비상임위원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건가. (국조특위에) 나가겠다는 사람과 나가지 말자는 사람은 누구였나”라며 “위철환 증인은 상임위원장로서 어떤 조치를 했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위 상임위원은 “비상임위원들이 어제 제 이야기에 다 공감하고 전부 참석한다”고 했다”면서도 “비상임위원들은 상임위원들과는 달리 다 본인의 직업이 있다. (출석) 시기는 본인들의 각자 사정이 있는 것 같다.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강요할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이에 양 의원은 “7명이 왜 다 안 나온 것인지 물은 건데 답변이 왜 이런가”라며 질타했다.

이기현 민주당 의원은 “중앙선관위원 9명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추천한 3인으로 구성된다. 그분들 중에 비상임위원 7명이 그대로 안 나왔다. 선관위가 국민을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선관위가 국

민을 바라보는 태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실선거 관리와 참정권 훼손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특위 위원장은 이날 이에 회의에 불참한 증인들의 출석을 재차 요구했고, 위 상임위원은 불출석한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7명 중 5명이 오후 회의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태약 전 위원장은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위원장으로서 위원회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전 위원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 투표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을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낮추는 종합관리 지침 변경을 사무총장 전제로 처리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김남희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해당 지침 변경을 사전에 보고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허철환 전 사무총장도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국민께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허 전 총장은 지침 변경에 대해선 “한국행정연구원 용역 결과뿐만 아니고 투개표는 구시군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구시군 위원회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해명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 李 “코스피 상승, 딴 세상 이야기”... 청년 소외감 지적

청년세대 자산 양극화 해소 강조 선관위 철저한 수사·개혁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반도체 호황과 주식시장 성장으로 인한 자산 양극화를 우려하며 “역대급 성과급이나 역대급 코스피 지수도 나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또 석유최고가가격제는 당분간 유지하되, 가격 상한은 인하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선 수사가 필요하면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 호황, 또 주식시장 급성장’이라고 하는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고 하는 그들이 질게 드리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주요 7개국(G7) 참석차 유럽 순방을 통해 한국에 대한 평가에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해결해야 할 내부 문제를 해결하면 이상적인 모범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로 청년세대의 양극화를 꼽았다. 2030세대가 자산을 형성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집안 환경이나 대·중소기업 취업 여부 등으로 자산 형성의 출발점이 다르다는 점을 짚은

셈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및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자산 양극화를 지속적으로 우려해왔다. 이런 가운데 청년세대의 소외감을 짚은 건 최근 6·3 지방선거에서 2030 표심이 일부 돌아섰다는 분석을 반영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정책 전반에 걸쳐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이 그래서 더 중요하다”면서 “아울러 일자리, 자산 형성, 창업, 주거 등 청년 삶 전 영역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을 조속하게 확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서민 물가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면서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동 전쟁 종전 협상이 이어지고 있으나, 석유가격 안정에는 시간이 걸리는 걸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초과세수를 바탕으로 유류세 지원 등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물가 부담이 있고, 석유류 제품 가격이 너무 올랐다”며 “반도체 등 초과세수가 예상되고 그렇다면 유류세를 좀 낮춰도 재정 부담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 이게 서민들의 소비 여력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없나”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선관위) 내부가 경각심을 갖지 않고 방

만하게 운영한 측면이 있는데 형사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수사하고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잡으로 안타까운 것이 정부 통제에 있는 관리 범위 내에 있으면 손이라도 써보겠는데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다 보니까 관리도 통제도 불가능한 상황이라, 일상적 감시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내부가 문제가 많이 생긴 것 같다”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으로 선관위의 ‘방만 운영’을 지목했다.

이에 국회에서 선관위 개혁안을 만들기 전까지는 중앙선관위 내에서 논란이 됐던 예산 낭비, 채용 비리, 외유성 출장 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현재 30여명가량인 검경합동수사본부(합수본) 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 민주당 “법사위원장 사수”... 원 구성 협상 결렬 땐 표결

여야, 주요 경제 상임위원장도 대립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문제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가 “결단을 내리겠다”고 발언한 것을 감안하면, 여야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 표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주 내 원 구성 안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도 여야에 오는 24일 오전 중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2년 차 안정적 국정 운영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책임 있는 여당이 법사위를 계속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전반이 국회에서 내란수괴 파면과 내란일당 심판, 민생예산과 민생입법을 통한 민생회복,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개혁 완수와 사법개혁 3법 관철 등 국민이 인정하는 성과를 올렸다”면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후반기 국회에서는 민생과 개혁을 위해 할 일이 더 많다”면서 “7월부터 일하는 국회를 가동하기 위해 원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단언했다.

또 법사위 배분 문제를 놓고 여야 간 협상이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걸 두고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생각이 없다”며 “의석 수대로 상임위를 배분하든,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책임지고 맡든 결단을 내리겠다”고 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회는 국회법을 지켜야 하고, 일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즉시 원구성 절차에 협조하라”고 했다.

천 원내수석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오는 24일 정오까지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차질없이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어 “원구성 협상이 이달 내 마무리 안 되면 국회는 정기회 회까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된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의 발목을 잡으며 버티고 있고, 민주당에 일방적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짜 일방적인 것은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직 요구인데, 이것이 가능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건인가”라며 “이재명 정부 지난 1년간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도 국민의힘 법사위원 몇몇이 반대했다”고 했다. 천 원내수석은 “더이상 관행이라는 이유로 국회 근무 태만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급주 내 원구성이 마무리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현재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본

회의 부의 전 법안의 최종 관문 역할을 하는 국회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경제상임위원장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국민의힘이 맡고 있는 재정경제기획위, 정부위 위원장직을 탈환 대상으로 꼽고 있다. 만약 여야가 끝내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임위원 선임 절차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상임위원장직을 두고 이번주 중 본회의에서 표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취재진에게 “첫 관문이자 양당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사위원장(배분) 논의가 진척이 안 되고 있다”며 “주요 경제상임위를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 (여야 간) 팽팽하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